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延河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언

제나 저희 연구원을 아껴주시고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보건·의료·복지부문의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해 드리고자 창간되었던 월간 『보건복지포럼』이 이제 1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포럼』은 지난 한해 동안 보건복지부문에 있어서의 현안사항에 대한 정확한 분석, 저희 연구진이 수행한 연구결과의 신속한 전달, 연구원이 주최한 정책토론회나 공청회 내용의 전달, 국내외 정책동향과 이의 시사점 소개, 관련 통계의 게재 등을 통하여 전문가, 일반인, 그리고 정책당국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함으로써 여러분으로부터 신뢰받는 보건복지 정책연구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이번 창간 1주년 기념호에서는 ‘고령화 시대의 노인정책’을 이달의 초점으로 하였습니다. 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사회전반의 노동력과 저축여력을 약화시키고 노인계층의 소득보장이나 의료보장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는 등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시대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노인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함께(복지) 나아가는(성장) 공동체』 구축이라는 큰 틀 속에서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전환이 필요합니다.

6.3%입니다. 그러나 고령인구의 비율이 2000년에는 7%를 넘어서 우리도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게 되고, 2022년에는 14%를 넘어서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될 것입니다.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노인에 대한 사회의 부양부담도 크게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주로 가족이 담당해왔던 노인부양기능이 점차 축소되어 사회로 이전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으로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이 약화되고 있으며,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들만이 혼자 살아가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일반적으로 빈곤, 질병, 소외로 표현되는 3고(苦)를 겪고 있으며, 향후 고령화사회가 되면 이러한 노인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保社研』은 21세기에 예상되는 각종 노인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정책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 수년간은 우리나라 노인복지 제도가 정착되어 가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노인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함께(복지) 나아가는(성장) 공동체』 구축이라는

큰 『틀』 속에서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전환이 필요합니다. 소극적인 ‘노인보호’의 개념에서 적극적인 ‘노후보장’이라는 개념으로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며, 단편적인 대응요법적 처방에서 고령화라는 사회변동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차원의 복지정책이 수립·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노후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며, 지역복지체계의 확립을 통해 ‘가족-이웃-지역사회-국가’로 이어지는 복지공동체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 정책과제로는 첫째, 건강하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에게 대해서는 국가지원을 통한 소득·보건의료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을 위해서는 고용을 확대하고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중산층 이상 노인을 위해서는 실버산업의 육성과 노인여가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시설보호를 위주로 하는 정책보다는 재가노인에 대한 복지정책을 강화함으로써 노인이 가정에 머물면서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는 노인복지정책의 추진에는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

가 하는 문제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나 사회보장부담률은 아직도 1인당 소득수준이 우리와 비슷한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 ‘저부담-저복지’의 수준에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노인복지 재원의 확충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재정책확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고령화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로서는 노인복지정책의 개발·수립에 좀더 많은 관심이 모아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진국의 경험과 우리의 역사적 전통, 의식, 경제상황 등을 감안한 한국적 노인복지 모형의 개발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저희 『保社研』은 『삶의 질』의 선진화에 앞장서는 견인차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자부해 봅니다. 이제 균형된 복지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한국적 복지모형의 구축이라는 큰 『틀』 속에서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 보건·복지정책의 개발에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